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정책

## [정당명 : 공화당]

정책순위 : 1	성매매 합법화
내 용	<p>1. 목표 :</p> <p>자발적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 특정 구역 내에서는 성구매와 성판매를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p> <p>집창촌 여성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처우로 사각 지대에 놓여 있고,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성관계의 내밀한 영역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가동 할 수는 없다.</p> <p>특정 구역 내 성매매 합법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성적소외자들의 인간성 존엄과 성범죄 방지를 위해 서라도 합법화 되어야한다.</p> <p>독일과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이며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프랑스·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지않고 알선·호객 행위 등만 금지하고 있다.</p> <p>2. 이행방법 :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법률제정</p> <p>3. 이행기간 : 2016. 4월 - 2017. 12월</p>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정책

## [정당명 : 공화당]

정책순위 : 2	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
내 용	<p>1. 목표 :</p> <p>현재 북한에서 저지르는 핵개발을 지켜 볼 수만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위하여 깔아놓은 거대한 원자력 기술을 추수할 때이다.</p> <p>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원자핵공학 권위자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았을 때 최장 18개월 정도면 핵폭탄, 더 나아가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다.</p> <p>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를 통해 핵연료와 핵융합에 필요한 핵심 물질인 삼중수소를 확보할 수 있고 한미원자력협정 재개정에 따라 완화된 재처리 능력 등을 고려 할 때 핵무기 개발 기술 확보는 어려운 게 아니다.</p> <p>이에 자위적 핵무장, 거국적 핵안보 체재 구축, NPT탈퇴 등을 결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p> <p>2. 이행방법 : 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에 관한 법률제정</p> <p>3. 이행기간 : 2016.4월 - 2020. 1월</p>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정책

## [정당명 : 공화당]

정책순위 : 3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
내용	<p>1. 목표 :</p> <p>6·25참전군인과 월남 참전군인의 참전수당을 1,000% 인상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겠다.</p> <p>피와 생명을 담보로 조국을 지키고 국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낸 6·25참전군인과 월남 참전군인의 명예와 노후를 보장하는 현실적인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다.</p> <p>지자체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해 6·25전쟁과 월남전쟁에서 숨진 군인의 유족에게는 한 달 5만원의 명예수당을 주는 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유족에게는 매달 50만원의 수당과 생존 참전군인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p> <p>특히 6·25참전군인과 월남참전군인에게 고속도로통행료 면제카드를 발급하겠다.</p> <p>2. 이행방법 :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에 관한 법률제정</p> <p>3. 이행기간 : 2016.05월 - 2017.12월</p> <p>4. 재원조달방안 : 기존 사회복지 예산 중 우선 배정</p>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정책

## [정당명 : 공화당]

정책순위 : 4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내 용	<p>1. 목표 :</p> <p>노동법이 적용안되는 유일한 현장이 택시업계이다  노동법이 유명무실하게된 이유는 하위법인 택시법을 따로  두어 노예제도와 같은 사납금 착취행위를 정당화 하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p> <p>택시노동자는 회사원이 아니다. 사무직원들과 경영진을  먹여 살리는 일꾼이지만 그들은 택시노동자들을 한낱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p> <p>그리고 현재 택시기사들의 기본급은 대체로 100여만 원  정도 인데 이것은 각종수당을 붙인 것이고 거기서 4대  보험과 어용노조 조합비로 20만 원 정도 빼면 실제 기본은  70여만 원 정도가 현실이다.</p> <p>따라서 현실적 노동법에 의해 기본급 100%를 인상하도록  택시법을 개정하여 명문화 하여야 한다.</p> <p>2. 이행방법 : 택시법에 관한 법률제정</p> <p>3. 이행기간 : 2016.4월 - 2019.12월</p>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정책

## [정당명 : 공화당]

정책순위 : 5	5.18 민주화 재평가
내 용	<p>1. 목표 :</p> <p>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평가가 상반되어 있어 이념간의 극한 대립으로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을 단절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평가 절실히 필요하다.</p> <p>광주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측의 추천인 5인과 5.18 폭동이라 측의 추천인 5인과 정부의 추천인 5인의 합의로 과학적인 검증을 한다면 사회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의 대승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5.18에 대한 평가가 나오도록 한다.</p> <p>2. 이행방법 : 5.18 재평가를 위한 특별법 제정</p> <p>3. 이행기간 : 2017. 1월 - 2018. 12월</p>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정책

## [정당명 : 공화당]

정책순위 : 6	종북 좌익인사 북한이주
내 용	<p>1.. 목표 :</p> <p>해방이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이념간의 극한 대립이 사회 갈등과 사회 분열 조장으로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을 단절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화합의 대승적 이념이 절실히 필요하다.</p> <p>이념이 북한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사람을 신청자에 한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북한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의 기본 가치인 생활권과 삶에 관한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해 주고자한다.</p> <p>2. 이행방법 : 종북 좌익인사 북한이주에 관한 법률제정</p> <p>3. 이행기간 : 2016.4월 - 2020. 01월</p>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정책

## [정당명 : 공화당]

정책순위 : 7	사형제도 이행
	<p>1. 목표 :</p> <p>김대중 정권부터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한때 사형수였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계속 사형집행을 거절하는 상태로 퇴임하여 그 이후 정권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p> <p>하지만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혐기적인 강력살인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살인사건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사회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다.</p> <p>이에 국가대개조의 차원과 강력한 통치의 상징으로 하루 속히 사형제도를 이행시킴으로써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으며 살인마에게는 경종을 울려주고자 한다.</p> <p>억울하게 복역 중인 사형수는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묻지마 살인 등의 범인은 이기적인 이유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흉악범이기 때문에 인정이나 인권에 연연하지말고 사형을 집행해야한다.</p> <p>2. 이행방법 : 사형제도 이행에 관한 법률제정</p> <p>3. 이행기간 : 2016.4월 - 2018.12월</p>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정책

## [정당명 : 공화당]

정책순위 : 8	복수당원제
내 용	<p>1. 목표 :</p> <p>복수당원제는 100%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대안 정책으로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의 당원으로 입당할 때 둘 이상 정당당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민의 심각한 나뉜 현상을 복하고 지역감정해소와 국민통합의 100%상향식공천의 목적이다.</p> <p>정당의 경선문제를 국민여론조사로 하는 것은 불법선거가 된다고 본다. 소속된 정당의 경선을 해당지역구 국민에게 여론조사 하는 것은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지했던 후보가 공천이 되어 선거를 치를 경우에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행사 때 당선 가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당경선을 위한 국민여론조사는 선거사무원이 아닌자가(여론조사기관 또는 소속정당) 선거운동을 하는 결과가 발생 된다.</p> <p>2. 이행방법 : 복수당원제에 관한 법률제정</p> <p>3. 이행기간 : 2016.4월 - 2018.12월</p>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정책

## [정당명 : 공화당]

정책순위 : 9	지방자치 단체장 임명제
내 용	<p>1. 목표 :</p> <p>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에 명시되고 우여곡절 끝에 1991년부터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때는 단체장이 임명제였기 때문에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p> <p>그러나 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이 더 많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는 세금의 대부분이 국세이고 지방세 항목은 많지 않으므로 결국 중앙정부에 예산을 의존하고 나아가 행정사무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p> <p>그리고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인선함에 따라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실적 쌓기를 위한 전시성 행정을 하고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보여 주기식 선심성 집행을 함에 따라 그 부담을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으므로 대통령 임명제를 시행해야한다.</p> <p>2. 이행방법 : 지방자치 단체장 임명제 특별법 제정</p> <p>3. 이행기간 : 2016.4월 - 2019.12월</p>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정책

## [정당명 : 공화당]

정책순위 : 10	사교육 전면금지
내 용	<p>1. 목표 :</p> <p>2014년 3월22일 “선행학습 금지법”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뿌리 깊은 학벌위주의 고질에 따라 대입경쟁에 의한 계층간 교육 양극화 현상은 여전하다.</p> <p>학원이 선행 교육을 하는 것은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에 이어 영어, 수학에 한해 방과 후 허용된 것에 이어 방과 후 전체과목에서 선용학습이 허용된 것이다.</p> <p>이에 대해 교육관계자들조차 졸속적인 법률 추진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다각적인 검토와 실효성을 판단해 법을 개정하여 사교육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오히려 경제와 교육을 살리는 것은 물론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p> <p>2. 이행방법 : 사교육 전면금지법 제정</p> <p>3. 이행기간 : 2016.4월 - 2020.1월</p>